

#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와 21세기 국제질서: 이론과 권력의 중첩적 동학\*

유희복\*\*

## | 목 차 |

I. 서론	IV.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
II. 중국의 주요 국제관계이론	V. 결론
III.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중국의 이론과 전략의 중첩	

## | 논문요약 |

이 글은 중국의 주요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시각 고찰과 전략에 의한 검증을 통해 중국의 21세기 국제질서 구상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주요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주장과 2011년 '평화발전' 백서 및 2023년 '인류운명공동체' 백서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전략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론과 전략의 중첩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2세기 국제질서 인식을 파악하고,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자이자 유지자인 미국의 21세기 국제질서 및 관련 대중국 인식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기초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유파들은 공히 중국 고유의 정치문화에 착안한 이론 개발을 통해 현행 국제질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기존 국제질서 개혁에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두 백서 역시 기존 국제관계이론과 거버넌스 이념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중국의 고유문화 개념과 경험에 기초해 개혁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5435).

\*\* 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류지원팀 강사

국제관계이론 자체의 한계,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자인 기성 강대국 미국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21세기 국제질서의 개혁이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전략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주제어: 국제질서, 국제관계이론, 천하질서, 중국특색, 미·중관계

## I. 서론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중국의 노선으로 공식 천명한 이후, 중국은 비단 경제적 측면의 발전론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제관계이론 측면에서도 ‘중국특색’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에 무비판적으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국제질서 규범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가져온 좌절과 혼란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비로소 중국은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모색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외교학원, 베이징대, 푸단대 등 우수 대학에 국제관계 관련 학과들이 설치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영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孫吉勝 2013, 10) 1987년 상하이에서 국제관계이론 토론회를 개최해 중국 최초로 국제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국제관계이론을 학습하고 중국만의 국제관계이론을 정립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倪世雄·許嘉 1997, 12). 그러나 좌우대립이 종식되지 않고 정치적 리더십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던 1980년대는 물론 천안문 사태와 중국위협론 등 대대외적 원인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은 이념적, 정책적 성향이 농후했고,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도 부족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등 서양의 국제관계이론과 주요 논저들이 중국에 번역, 소개되고 관련학계가 이를 습득하는 단계였다. 따라서 서구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비판적 습득의 기초 위에서 중국 자신의 시각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孫吉勝 2013, 14).

2000년대 이후 형성되어온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유파는 통상 자오팅양(趙汀陽)으로 대표되는 천하질서, 도의 현실주의를 내세우는 옌쉐통(閻學通 2014; 2016)을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 백가사상을 국제관계학 연구에 도입하려는 칭화학과, 그리고 단위 행위체가 아닌 행위체 간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그들의 상호작용, 즉 ‘과정’을 통해 중국적 국제관계이론을 개발하려는 친야칭(秦亞青 2009), 까오샹타오(高尚濤 2010) 등의 관계이론 등 크게 세 개 유파로 대별되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달리, 비록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나 런샤오(任曉 2015)와 같이 ‘공생’ 등 다른 개념과 용어들을 국제정치이론에 도입하려는 이른바 ‘상하이학파’도 중국적 시각에서 국제질서를 바라보려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귀수용(郭樹勇 2017)은 최근까지 형성되어온 중국 국제관계이론을 도의 현실주의, 공생이론 그리고 공치이론(共治理論)로 삼분하고 있고, 루펑(魯鵬 2018)의 경우는 국제정치의 관계이론, 도의 현실주의, 공생국제체계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하이 소재 다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생이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학파’에 ‘공생이론’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은 천하체계, 도의 현실주의, 관계이론에 더해 공생이론을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대표적 유파에 포함하고자 한다.

국제관계이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론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학문적 의미에서의 이론과 함께, 그림시안적 의미의 헤게모니로서, 콕스(Cox)적 의미에서 주체와 목적, 즉 국가 전략에 의해 타자에 대한 내재적 작동을 도모하는 권력의 일종으로서도 기능한다.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시각 및 중국의 전략이 이론과 실제, 보편과 특수,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의미이자 이론과 권력의 중첩적 동학을 수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국제질서에 관한 전략적 구상은 “서구의 자성”과 “주변부의 반란”을 넘어 중국을 단순한 서구 이론의 시험장 이상으로 볼 필요성(Noesselt 2012), 그리고 서구 중심적 국제관계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역, 국제, 혹은 세계가 아닌 “세계적 국제관계(Global IR)”이론의 정립 필요성을 지적하

고 그러한 차원에서 기존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바라는 아차리아(Acharya & Buzan 2017)의 기대를 넘어, 전인갑(2015)의 지적처럼 중국이라는 특수성의 보편화라는 이론과 전략 양 측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콕스(Cox 1981, 128)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론이 항상 어떤 주체와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중국이 구축하려는 국제관계이론 역시 주체와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오칭양(2011, 1-11)은 중국이 현대판 천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력 등 하드파워 이외에 스스로 사유능력을 회복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옌쉐통(2011, 99)은 도의 현실주의의 핵심인 순자(荀子)의 국가 간 정치철학을 재해석하는 이유는 중국의 현재 부상 전략과 관련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관계이론의 주체이고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정체성 확립이 그 목적임을 밝힌 것으로, 국제관계이론이라는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자(김현준 2016), 사실상 그람시안적 패권(Gramscian hegemony)의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는 이론 자체를 포함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에 의한 기성 국제질서의 개혁 혹은 수정을 전제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다음 장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대두된 네 개의 대표적인 국제관계이론 유파가 구축 중인 이론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이에 기초해 III장에서 21세기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2011년 ‘평화발전’ 백서와 2023년 ‘인류운명공동체’ 백서의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시각과 전략의 중첩성을 확인한다. IV장에서는 같은 시기인 2010년, 2017년, 2022년에 각각 발간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질서 및 대중국 인식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 국제관계이론과 전략이 제시하는 21세기 국제질서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V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 II. 중국의 주요 국제관계이론

### 1. 천하체계론

‘천하체계론’은 2005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철학자인 자오팅양이 그 현대적 부활을 주장하며 주목받았다. 그가 규정하는 ‘천하’는 세계에 관한 개념이자 ‘제국’에 관한 이념으로, 이는 ‘제국주의’에 의해 변질되기 전의, 제국이 추구하는 일종의 이상적 형태를 상정한다. 이에 따라 그는 천하를 지리학적 의미에서 인류의 거주공간으로서 전 세계, 심리적 차원에서 전 세계 만인의 또는 대다수의 생각이나 마음으로서 “민심(民心)”, 그리고 윤리 및 정치학적 의미에서 일종의 세계 일가(世界一家), 즉 사해일가(四海一家)에 대한 지향으로서 이상 혹은 이상향(烏托邦), 세 가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정의한다. ‘천하’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의미가 삼위일체이자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세계”를 가리키며, 이러한 ‘천하’의 개념이 중국철학의 진정한 기초를 구성한다고 본다(趙汀陽 2011, 27-29).

자오팅양은 천하의 이러한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윤리 및 정치학적 의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사해일가인 ‘천하’는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세계제도”와 이러한 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는 “세계정부”에 대한 상정과 추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趙汀陽 2011, 28). 천하는 현재의 주권국과는 달리 국경의 안과 밖이 존재하지 않는 “무외(无外)”의 세계를 전제하는 제도이자 정치 단위다. 이러한 논리는 세계제도로써 천하와 함께 상정되는 행위체, 즉 세계정부로서 ‘천자(天子)’에 의한 것으로, 천자는 천하를 집으로 삼기(以天下爲家) 때문에 밖이 없는 “무외의 원칙(无外原則)”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하관은 단위로서 민족/국가에 의해 전개되는 현재의 국가간 정치, 즉 국제정치를 진정한 세계 정치로 보지 않는다. 또한, 천하에는 안과 밖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에서와 같은 “이단(異端)”의 관념과 민족주의 발생 가능성도 작다(趙汀陽 2011, 33-41).

자오팅양은 비록 천하의 ‘윤리 및 정치학적 의의’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심리적’ 의의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천하가 세계제도와 세계정부를 상정한다면, 전 세계 다수 시민의 마음 또는 뜻인 “민심”이

세계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으며 세계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오팅양에 따르면, 세계제도는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엘리트(精英)”를 다수 포함한 전 세계인 다수가 동의하는 제도로, 공정(公正)이라는 윤리성에 의해 정치적 합법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세계제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척도가 바로 민심이다. 그러나 민심을 세계제도에 반영하는 방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아니다. 민심은 민주와 다르며,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趙汀陽 2011, 19-20). 진정한 민심은 대중의 욕망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이익과 행복에 기여하는 공동 향유의 관념(共享觀念)으로, 공익에 대한 이성적 분석과 사고(爲公而思)의 결과이며, 통상 엘리트의 사고와 언어, 그리고 자생적 토론과 검증은 거치는 공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천하의 세 가지 의의 중 심리적 차원에서 민심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정작 여기서 민심의 존재 형식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천자가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경덕(敬德)”, 즉 민심을 중하게 여기고, 민정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것이다(趙汀陽 2011, 38-39). 민심 파악과 반영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천하가 세계제도라면 천자는 세계정부에 해당해야 하지만, 자오팅양은 흔히 세계정부로 비유되는 유엔은 민족국가 간 이익 협상의 장일 뿐 세계정부는 아니며, 천하의 집정권은 ‘무외의 원칙’에 따라 어느 민족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설명에 그친다는 것이다(趙汀陽 2011, 101-104). 즉, 자오팅양은 세계제도와 정부를 설명하지만, 특히 세계정부의 구성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천하 개념에 근거해 자오팅양은 사유방식과 계산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서구와 중국의 세계에 대한 시각 차이와 그에 따른 세계질서의 차이를 논하면서 현대 국제질서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자오팅양은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대변하는 서구의 자타와 적아 구분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분열적인 정치 사유방식, 가정(家)-국가(國)-천하(天下)로 이어지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사유 단위체계와는 달리 개인에서 시작해 공동체를 거쳐 국가에 그치는 민족/국가에 기초한 베스트팔렌 체제는 개인과 민족/국가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면서 분열과 분쟁, 대립과 전쟁 등 각종 부정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

로 내포하고 있고, 이를 조정할 실체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며, 따라서 이를 “무외의 원칙”에 기초한 천하체계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趙汀陽 2011).

그가 천하 이념의 현대적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천하체계만이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무외의 원칙을 통해 전 세계를 정치 단위로 보는 철학 관념이며, 현실적으로도 서구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은 물론, 고대 중국의 제국도 그가 보는 천하의 이상 중 극히 일부만을,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실천해 전체적 제국(專制帝國)을 형성했을 뿐, 오늘날 세계에 필요한 모델을 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천하/제국은 서구의 제국모델과는 본질이 다르다. 즉, 서구의 제국들이 “국가”, 특히 민족/국가인 데 비해, 천하는 “제도가 있는 세계”로서 일종의 정치/사회제도 또는 세계사회라는 것이다(趙汀陽 2011, 29-30). 군사력에 의한 영토확장과 불확실한 변경을 특징으로 했던 로마제국은 현대 민족/국가 시대에도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며, 대영제국은 민족/국가에 기반한 전형적인 현대 제국주의로서 식민지, 불평등 무역과 지식 생산을 통해 형성된 모델로, 천하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글로벌 제국주의로서 현재의 미 제국주의 모델 역시 대영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패권, 경제적 지배와 지식패권을 통해 타국의 “의존성(依附)”을 유발함으로써 패권을 형성했고, 더 나아가 문화지식의 통치, 게임의 종류 선택과 그 규칙의 제정을 통해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법과 규범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외자(法外國)”로 규정되어 천하 이념에 위배된다(趙汀陽 2011, 69-71).

자오팅양은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서구 역사상의 패권 모델 모두가 “개체(个体)”와 “민족(民族)/국가(國家)”를 이익의 계산 단위로 삼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서구와는 성격이 달랐지만, 중국의 고대 제국도 천하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는 천하 이념이 “국가관”에 그치는 서구의 사고와는 달리 “무외의 원칙”을 내재적 특징으로 하는 “세계관”, 즉, 국가를 넘어선 세계를 사유의 단위로 상정하기 때문에 민족/국가라는 계산 단위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의 가치와 현대적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趙汀陽 2011, 71-73). 결국, 서구 역사상의 제국은 물론, 고대 중국의 제국이 실천했던 천하도 그가 규정

한 천하의 이상을 현실에서 의미있는 수준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의 천하 이념과 이상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趙汀陽 2011, 71).<sup>1)</sup>

이러한 분석에 따라 자오팅양은 천하 이념의 현대적 재해석과 실천을 위해 중국이 먼저 ‘생각하는 능력(ability to think)’을 회복해 ‘중국 재건(重構中國)’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자오팅양의 주장은 결국 서구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현재의 민족/국가 체제가 전쟁과 갈등 등 모든 국제문제의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천하체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베스트팔렌 체계를 대체해야 하고, 중국이 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 2. 도의 현실주의

도의 현실주의는 청화대 교수인 연쉐퉁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인 쉬진(徐進)과 순쉐핑(孫學峰) 등 ‘칭화학과’로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이 추진해 온 이론 분파다. 이들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묵자, 관자, 한비자 등 진나라 이전 춘추전국시대 7인의 사상가들의 국제관계에 관한 사상을 현대 국제관계 이론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제관계이론을 수정 혹은 보완하려 시도한다. 쉬진과 순쉐핑(2014, 19-26)에 따르면, 칭화학과의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의 국제정치 관련 사상과 철학이 담긴 유의미한 문헌을 조사하고, 이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한 후, 역사적 사례와 현대에 적용하며 국제관계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며 도출한 성과는 자료와 논문으로 출판되었으

---

1) 자오팅양은 단위와 그에 따른 이익 계산의 폐단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화의 책략(和策略)”을 제시한다(趙汀陽 2010, 46). 그가 “공자개선(孔子改進)”이라고 명명한 ‘화의 책략’은 보편적 평화의 세계정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성의 인정을 전제로 하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익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이익 호혜 최대화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공자개선은 파레토 개선과는 달리 비록 파이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모두가 만족하고 수용 가능한 이익의 개선을 가리킨다. 그는 비록 ‘화의 책략’이 제로섬 게임이나 인간 본성 등으로 인한 모든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충돌을 약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한다(趙汀陽 2010, 47-49).

며, 특히 2011년 출판된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는 도의 현실주의를 집대성한 저작으로, 옌쉐통의 이론과 함께 학자들의 비판 논문, 그리고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어 도의 현실주의의 논리와 주장 및 비판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옌쉐통이 제기하는 도의 현실주의의 요체는 ‘도의(道義, morality)’다.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 지도자와 관료는 물론, 행위체로서 지도국이 되고 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역시 모두 ‘도덕’으로 귀결된다. 이는 그가 1, 2단계 연구를 거치며 도출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7대 사상가들의 국제정치 관련 사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지도국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도덕’을 공통으로 꼽고 있다는 결론에 근거한다. 옌쉐통은 7인의 춘추시대 사상가의 사상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현실주의자로서 이 중에서 특히 ‘순자’의 사상에 주목하면서 권력(power)을 물질적 권력과 도덕적 권력으로 나누고, 주류 국제관계이론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물질적 권력에 치우치고 있음을 비판한다(Yan 2011, 64-66). 권력의 이분법을 통해 옌쉐통은 이 두 권력의 조합에 따라 위계질서 최상위국의 성격을 왕권(王權, Humane authority), 패권(霸權, Hegemony), 강권(強權, Tyranny)으로 삼분한다. 왕권은 강력한 도덕 기반과 서로 다른 정도의 권력을 갖고, 패권은 다소의 도덕과 신뢰도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며, 강권은 강한 권력을 갖지만, 도덕 기반은 없는 유형이다(Yan 2011, 86-91). 옌쉐통은 이 세 유형 중 왕권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력이 강하다고 보며, 따라서 중국의 지도국 모델로 패권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왕권을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Yan 2011, 69-72; 99-100). 즉, 확실한 왕권의 확보를 위해 도덕을 강조하지만, 하드파워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도덕’과 ‘현실주의’가 결합된다.<sup>2)</sup>

도의 현실주의는 국제질서가 위계적이며 이 위계의 당위성과 안정성을 현실적 차원에서 강조한다. 인구와 국토를 포함한 국가의 크기와 그에 따른 권력의 크기는 국가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국력의 차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옌

2) 서정경(2022, 52-54)은 옌쉐통의 ‘도덕’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말하는 도덕의 판단기준은 상대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낮은 수준의 도덕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한다.

쉐통은 주권의 ‘평등’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의한 중국 비판에 대해, 이는 서구의 이론적 시각과 현실적 행위가 위선적이기 때문이며, 강대국과 약소국이 구분되는 위계질서가 오히려 일관적이라고 강조한다. 즉, UN과 IMF 등 국제기구에서 모든 국가는 동일한 지위와 투표권 및 분담금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강대국이 더 많은 권리를 갖는 만큼 그 의무도 더 많고,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만큼 더 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Yan 2011, 96; 104-106; 219).

엔쉐통은 이상의 도의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지도자가 도덕적 권위를 갖추고, 개방정책을 통해 기술이나 경제발전 차원의 인재만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료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할 것을 제언한다(Yan 2011, 102-104). 대외적으로는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위선, 즉 이중잣대를 버리고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고 모범을 보여 소프트 파워로 타국의 자발적 추종을 끌어냄으로써 패권을 넘어선 왕권형 지도국을 지향하며 부상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엔쉐통은 중국이 현재와는 다른 차별적인 국제규범의 제시와 그 규범의 자발적이며 일관적인 실행을 통해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과는 다른 리더십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Yan 2011, 219-221).

### 3. 관계이론

베이징 외교학원의 친야칭이 주창하는 ‘관계이론’은 중국의 전통관념이자 관습인 ‘관계’와 그 동태적 변화로서의 ‘과정’에 주목한다. 처음으로 ‘중국학파’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이자 중국에 구성주의를 소개한 동시에 자신도 구성주의자인 친야칭은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성’ 문제에 친착한 학자다. 그는 이론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중국학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엔쉐통과 달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며,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학파’의 성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秦亞青 2006, 7-9). 더 나아가 그는 엔쉐통의 도의 현실주의가 비록 중국의 역사와 철학을 국제관계에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성(rationality)과 실증주의 등 그 분석과 이론 정립에 필요한 개념과 방법론이 서구의 주류 국제관계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Kim 2016, 73 재인용).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 그는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의 전통과 문화에 착근한 중국의 ‘관계성(relationality)’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를 인식하는 이론의 구축을 시도한다. 2009년 관계와 과정, 과정 구성주의 등을 주장한 이후 그의 이론성과는 2012년 증문에 이어 2018년 이의 수정, 영문판인 *A Relational Theory of World Politics*를 통해 집약되었다.

‘관계이론’은 서구 국제관계이론의 근간인 ‘합리성’에 대해 ‘관계성’을 이론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친야칭(2009, 69)은 기존 국제관계이론이 행위체로서 국가와 구조로서 체제를 다루고 있으나 정작 ‘관계(relation)’는 부재한다고 보고 이를 이론 구성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는 모든 사회적 구성원은 개인과 국가를 불문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그러한 관계는 존재론적 선행성(priori)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관계는 개체와 구조와는 다른 존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 분석단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관계를 개체와 구조의 중간단위로 위치시키고, ‘관계’가 행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그러한 관계는 동태적이고, 따라서 권력 생성과 변화 및 소멸을 통해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또, 합리성 역시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이익 또한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Qin 201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존재로서 개체는 개체로서만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관계(relatedness)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과 이익도 비로소 규정된다(Qin 2018, 121-122). 예를 들면, 노예는 주인이 있어야 노예일 수 있고, 주인 역시 노예의 존재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따라서 개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그러한 정체성이 부여된 이후에야 그에 따른 이익의 규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존재와 정체성이 규정되어 이익이 정의되면, 그러한 이익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권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력도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관계이론은 권력을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the ability to manage relations)”으로 정의한다(Qin 2018, 288). 즉, 관계는 권력 자원 또는 잠재적 권력이며, 관계의 관리는 영향력 또는 실질적 권력(actual power)을 의미한다. 친야칭은 관계에 기초해 정의된 권력은 강압적, 억압적, 일방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존의 주류 권력개념

과 다르게, 상호적이며 건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권력의 개념은 기존 주류 국제관계이론이 간과한 것으로 권력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Qin 2018, 283-288).

‘관계의 관리(management of relations)’라는 측면에서, 관계는 당연히 단수뿐만이 아닌 다수의 관계를 포괄하며, 이런 차원에서 ‘관계의 관계’라는 메타 개념이 등장한다. 친야칭은 관계의 관계를 ‘메타 관계(Meta-relationship)’로 명명하고, 이 메타 관계를 모든 관계의 근본이자 최상위 관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메타 관계는 관계이론에서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원형으로서 기능한다. 이어서 이러한 원형의 관계인 메타 관계를 해석하는 개념으로서 친야칭은 역시 중국 고유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로부터 ‘중용’의 변증법(Zhongyong Dialectics)을 제시한다. 그는 중용 변증법의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포용성(inclusivity), 보완성(complementation), 조화성(harmony)을 들고, 중국의 중용 변증법은 서구의 헤겔식 변증법 논리(Hegelian logic)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헤겔의 전통은 대립하는 두 개체의 모순과 갈등, 양자의 적대성과 화해 불가능성을 정(thesis)과 반(antithesis)의 투쟁과 제거라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 합(synthesis)에 이르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데 비해, 중용의 변증법은 두 극이 포용성, 보완성, 조화성에 기초해 진화적으로 공동의 합(co-theses)을 이루며 조화(harmony)에 이르러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Qin 2018, 152-194). 친야칭의 ‘관계이론’은 결국 국제 ‘관계’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는 중용의 변증법에 기초한 관계의 관리, 즉 관계 권력의 행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그 핵심 주장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공생론

공생학과는 푸단대 사회학자 후쇼우쥔(胡守鈞)이 생물학에서 차용한 ‘공생’의 개념을 사회학에 적용해 2001년 『사회공생론(社會共生論)』을 통해 소개한 뒤 2011년 이후 진잉중(金應忠), 런샤오, 쑤창허(蘇長和) 등 상하이 소재 대학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이를 국제관계에 적용하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사물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다양한 사물의 공존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이러한 다원성과 공존에 대한 인위적인 변경 시도

가 문제의 소재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진잉중에 따르면, ‘공생’은 국제사회의 기본 존재 및 발전 방식이며, 국제사회에서 공생성(共生性)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생관계의 주체성(主体性), 연결체(紐帶)로서 자원(資源), 공생성의 최대 한계(底線), 그리고 구속성(拘束性)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간략히, 주체성은 국가의 “자아실현” 욕구를, 유대로서의 자원은 자아실현을 위한 물질 및 비물질적 자원과 이에 대한 다양한 수요 관계로 형성되는 국가 간 연결을 가리키며, 최대 한계는 자아실현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의 이용에서 타자와의 공생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서로 포용해야 하는 한계점을, 구속성은 공생성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도구, 즉 구속성 도구로서 자원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각각 의미한다(金應忠 2011, 13-17). 런샤오 역시 ‘공생’은 서로 다른 사물이 공존하는 가운데 상생상성하고 공동 성장하는 양성(良性)의 상태이며, 생명력의 근원이자, 사물 성장과 발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공생질서의 수립에 필요한 공생관계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내생성(内生性), 상호성(交互性), 공생성(共生性)을 들었으며(任曉 2015, 21), 쭈창허 등도 공생관계의 특징으로 주체의 다원성(多元性), 평등성(平等性), 그리고 상황성(情境性) 세 가지를 제시했다(『文匯報』 2017/05/05).

다양한 주체의 공존이라는 ‘공생관계’를 이론의 근본으로 삼는 이들 공생학파는 서구의 사고방식이 일원적인 이유로 ‘주체-객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신과 다른 타자를 적으로 만들거나 자신과 동일화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모든 사물 존재의 기본 형식인 다원성과 평등성을 인정하는 사고방식, 즉 공생철학의 사유로 전환하고, ‘공생’ 관계의 특징에 기초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공생에 의한 질서는 ‘화(和)’의 질서이므로 주체와 객체를 나눠 적대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생’은 ‘공존’과 다른 초월적 개념으로, 공동생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두 측면의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홉스식 상태와 달리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공동생존과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任曉 2014, 33-35). 이에 따라 공생학파는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가 충돌을 회피하고 다양성을 통한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유엔과 같은 ‘세계정부’가 아닌 ‘대동(大同)’을 제시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공생의 길’을 제시한다. 공생론은 서구식 해법인 세계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으

로 증명됐으며,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초국가적 권위체가 필수적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공생’ 자체가 본래 다양성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즉, 공생철학의 확산을 통해 ‘공생평화(共生和平)’가 가능하다는 것이다(任曉 2019, 46-48).

이러한 ‘공생’의 질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자신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과 다른 역사와 정체성, 체제와 제도를 가진 타국을 평등한 주체로서 존중하며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다. 공생학파는 또 인권과 민주 등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사회 및 문화와 그 발전의 격차를 고려하고 그러한 시공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생관계의 특징의 하나로 제시되는 상황성, 즉 주체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간 문화와 제도 또는 체제와 가치 등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생질서의 역사적 사례로 공생학파가 주목하는 질서는 과거 동아시아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되었던 “공생체계(共生体系)”다. 공생학파는 서구의 사유방식 및 국제정치 관념으로 인한 현 국제체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중국이 주도했던 과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국 전통문화의 ‘공생’ 개념을 통해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천하체계의 현대적 부활을 제기하는 자오팅양의 주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동아시아 공생 질서가 하나의 다중심적 체제였고 몇 개의 중심이 상호 교차하고 있어 단일 중심의 등급질서가 아님을 강조한다는 데서 천하질서와는 다르다고 본다(任曉 2013, 22). 또한, 이들은 공생 개념에 기초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조공질서”가 자생적으로, 즉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 및 유지되었고, 형식상으로는 불평등 관계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성과 자주성이 존재한, 내생적이고 안정적인 질서였다고 해석한다.<sup>3)</sup> 비슷한 맥락에서

3) 런샤오(2013, 22)는 동아시아에 실존했던 이러한 공생체계가 통상 “조공체계(朝貢体系)”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중화세계질서” 또는 “조공체계”라는 명칭은 서양의 중국역사 학자인 페어뱅크(John K. Fairbank)에 의해 알려져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중국 중심의 등급 질서’를 가리키지만, 이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본질과 공생체계 본래의 함의, 특히 그 내재적 원리를 덮어버리는 큰 결함이 있는 만큼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중

쑤창허(2016, 21-24)는 열강질서와 세력균형질서, 화이질서(華夷秩序)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비교 분석한 뒤 공생질서의 구축을 주장하며, 오히려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화이질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사실상 서구판 화이질서로, “서이질서(西夷秩序)”로 대체해 명명하는 것이 그 본질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서구식 사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중국의 사유문화에서 건설적 방안을 찾아야 하고, ‘공생’이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생학파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주체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공생한다는 원리가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수립될 수 있다면 향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공생이 세계차원의 철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任曉 2019, 48-49).

### Ⅲ.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중국의 이론과 전략의 중첩

이 장에서는 앞서 다룬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논리와 주장이 중국의 대외전략과 내용상 어떻게 중첩성을 갖는가를 후진타오 지도부 2기 말인

---

화세계질서나 조공체계 등은 외생적 개념으로서, 공생체계 전체의 작동원리 중 일부만을, 그마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동아시아에 장기간 존재했던 평화적 질서는 공생체계로 명명되어야 하며, 이 체계의 원리가 현 국제질서의 폐해 수정에 필요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쑤창허(2016, 23-25)도 런샤오의 이러한 분석과 주장에 동의하면서, 선진적 조약체계가 낙후한 조공체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약체계가 동아시아의 기존 공생국제체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페어뱅크의 분석과는 달리, 실제로는 등급성이 더 강한, 서구에 의한 새로운 패권적 형태의 “조공체계”가 원래의 조공체계, 즉 공생체계를 대체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화이질서”나 “조공체계” 모두 중국의 향후 국제질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생질서의 재발견이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중국이 현 국제질서를 공생질서의 역사와 논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이후 국제질서 수립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과 지위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2011년과 현 시진핑 지도부 3기 초인 2023년 각각 발간된 두 개의 ‘백서’를 통해 살펴본 후, 그 이론 및 전략적 한계를 간략히 검토한다.

## 1. 중국 국제관계이론과 ‘평화발전’ 및 ‘인류운명공동체’ 백서

### (1) ‘평화발전’ 백서의 논리와 주장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한편, 직전 발생한 9·11을 계기로 미국과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며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된 소위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機遇期)’를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한 중국은 2010년을 전후해 영국,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등극했다. 중국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2004년 이후 ‘평화발전론’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sup>4)</sup> 이러한 배경에서 후진타오 집권기의 중국은 ‘평화발전’을 전략의 기조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조화사회(和諧社會)’, ‘조화세계(和諧世界)’ 등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개념에 기초한 대내외 환경 조성 전략을 추진했는데, 2011년 9월 발간된 ‘중국의 평화발전(中國的和平發展)’ 백서(이하 ‘2011 백서’)는 이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2011 백서’가 중국의 발전 방식이 기존 또는 서구의 발전 방식과 달리, 중국의 전통적 개념과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존의 다양한 경험을 융합한 차별적 부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시기와 내용으로 볼 때 그러한 전략이 중국의 전통 철학과 문화 및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발아해 2011년을 전후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중국 국제관계이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1 백서’는 중국이 현재는 물론 향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평굴기’는 중국개혁개방포럼 이사장이었던 정비젠(鄭必堅)이 2003년 11월 보아오아시아포럼(博鰲亞洲論壇)에서 행한 《中國和平崛起新道路和亞洲的未來》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비롯되었으나 ‘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감을 불식하기 위해 2004년 이후 ‘화평발전’으로 수정되었다.

후로도 장기간 평화발전 전략을 고수할 것임을 국제사회를 향해 공표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필요성과 필연성에 관한 상당한 근거와 논리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이 아닌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논리 및 주장과 사실상 다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콕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2023 백서’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1 백서’에서 중국은 이 백서의 발간 목적이 중국이 어떤 발전의 길을 선택했고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중국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평화발전의 길을 갈 것을 세계에 재차 선언한 후, 평화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다.<sup>5)</sup> 이러한 목적과 내용 전개를 위해 이 백서는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개척한 경위를 시작으로, 평화발전의 목표, 이를 위한 대외정책, 평화발전의 길 선택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을 거쳐, 중국의 평화발전이 갖는 세계적 의의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내용 구성과 논리 전개를 백서가 밝힌 두 개의 목적, 즉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선택한 이유와 그 세계적 의의의 제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목적에 관해 ‘2011 백서’는 ‘평화발전의 길’은 중국의 국정(國情)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발전경로로서 곧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이고, 과학발전, 자주발전, 개방발전, 평화발전, 협력발전, 공동발전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은 평화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발전과 조화, 대외적으로는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며, 그 총체적 목표는 ‘국가현대화’와 ‘공동부유’임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 방식 전환, 조화사회 건설 가속화, 평화적 국제환경과 유리한 외부 여건 조성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1 백서’는 또 평화발전의 길은 중국의 전통과 시대 조류, 중국의 근본이익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 발전의 내재적 필요에 따른 필연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즉, 평화발전은 중국의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것이자, 기본 국정이 요구하는 것이고, 세계 조류에 순응하는 선택이

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1),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全文)”, [https://www.mfa.gov.cn/web/system/index\\_17321.shtml](https://www.mfa.gov.cn/web/system/index_17321.shtml). (2022년 11월 17일 검색)

라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 즉 ‘2011 백서’가 제시하는 평화발전의 세계적 의의는 ‘전통적인 대국 굴기 방식의 타파’다. 평화발전의 길은 ‘중국이 모색해낸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발전경로’로서, 근대는 물론 20세기까지를 포함해 “국강필패(國強必霸)”, 즉 국가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기존의 대국 굴기 방식을 타파했다는 데에 그 세계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백서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과 실천이 이를 증명했고 이러한 세계적 의의는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이므로,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변경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고, 번영과 발전, 민주법치, 조화와 안정을 이룬 중국은 향후 분명히 세계에 더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2011 백서’의 목적은 중국이 선택한 발전의 길이 ‘평화발전의 길’이라는 것과 그 세계적 의의가 ‘기존의 대국 굴기 방식 타파’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서의 주장과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시각 간 논리적 상관성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백서가 제시하는 대내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11 백서’를 살펴보면,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고수하는 원인으로 제시된 대내적 요인은 중국의 국정, 문화전통, 근본이익과 장기적 이익, 대외적 요인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의 대주제, 또는 평화, 발전, 협력이라는 세계의 조류로 압축되며,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백서 전반을 관통하며 평화발전의 길 논리 전개에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1 백서’의 기저에 놓인 평화발전의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은 중국의 정체성과 이익, 분쟁 해결 방식과 대외전략 등을 드러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내적 요인으로서 ‘국정’은 동양의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의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체성 규정, ‘문화전통’은 가정(家庭)은 물론, 국제관계와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사상과 행위가 ‘화이부동(和而不同)’, ‘이화위귀(以和爲貴)’ 등 전통문화 개념, 특히, ‘조화(和譜)’의 개념에 기초한다는 점, ‘근본이익과 장기적 이익’은 인류 공동의 이익은 물론, 주권, 안보, 영토 완정, 통일, 헌법에 확립된 정치체도와 사회의 전체적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시하는 근거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2011 백서’는 또 대외적 요인, 즉 평화와 발전, 협력이라는

‘시대 조류’에 근거해 경제 세계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의존 및 협력을 강조하고, 특히 식민체제, 세력권 쟁탈, 무력확장, 패권추구, 강권정치, 제로섬 게임 등 기존의 대국 굴기 방식에 대한 부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신안전관 제창, 국제관계민주화 추진, ‘조화세계’ 건설 등을 제시하며 ‘평화발전의 길’에 세계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2011 백서’는 평화발전의 길 선택과 고수의 이유 및 세계적 의의를 국경, 문화전통, 이익, 시대조류 등 대내외적 요인의 제시와 이에 근거한 논리 전개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011 백서’가 국제사회에 대해 갖는 설득력은 결국 이 백서의 논리 전개 근거로 제시된 대내외적 요인의 적실성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논거에 관한 이론 차원의 적실성 제공과 설명력 제고가 바로 중국 국제관계이론이 담당하는 주요 역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실, 앞장에서 살펴본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논리는 공통의 ‘부정’과 각각의 ‘강조’를 통해 ‘2011 백서’가 제시하는 대내외적 요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으로 또는 각자 그 설득력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 즉, 천하체계론은 베스트팔렌 체제에 기초한 주권국가의 이익 추구 방식으로 나타나는 각종 폐해를 부정하고 ‘공자개선’을 통한 인류 공동이익 강조를 통해 평화발전의 논리를 제공하고, 도의 현실주의는 패권 및 강권 정치의 부정과 왕도정치 강조를 통해 영미 등 기존의 대국 굴기 방식과는 다른 중국의 발전 방식으로서 평화발전의 세계적 의의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관계이론은 개체의 부정과 관계의 긍정을 기초로, 국가 간 ‘관계’의 관리 기제로서 중국식 변증법인 ‘화’의 논리 제공을 통해 ‘화이부동’, ‘조화세계’ 등 분쟁 해결과 평화공존 및 공동이익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백서의 논리 강화에 이바지하고, 공생론은 이분법적 사고와 일원성을 부정하고 다원적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정치체제를 포함한 중국의 정체성 유지와 평화공존 및 평화발전의 논거를 제공한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유파가 제공하는 이러한 논리는 이처럼 ‘2011 백서’가 평화발전의 논거로 제시하는 대내외적 요인을 공히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발전이 갖는 세계 및 역사적 의의로 제시된 “국강필패(國強必霸)”의 부정과 ‘기존의 전통적인 대국굴기 방식 타파’는 단순히 시대 조류라는 대외적 요인

에 기초한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체 국제관계이론이 각각 그리고 중첩적으로 제공하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2011 백서’에서 대내외적 요인 중 하나로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논리 전개 과정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과 세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중국의 이익과 세계 각국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백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자신의 이익과 인류 공동이익의 일치성을 견지”하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번영과 안정은 중국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 등이다. 이러한 표현이 대내외적 요인의 설명 과정 전체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 같은 반복 강조와 배치가 단순한 사실의 기술이나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고려와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이러한 강조와 배치는 ‘평화발전’의 논리 강화는 물론, 향후 ‘조화세계’에서 ‘인류운명공동체’로, ‘평화부상’에서 ‘중국몽 실현’으로 초점을 확대 전환하는 데 있어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접점을 제공하는 중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1 백서’는 4장에서 이미 ‘2023 백서’의 핵심 개념인 ‘운명공동체’와 ‘인류 공동의 이익’ 및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류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천하체계론, 모든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로 공존을 넘어 ‘공생’해야 한다는 관계이론과 공생론의 논리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인류운명공동체’ 백서의 논리와 주장

후진타오 집권 2기 후반 ‘2011 백서’에 이어 시진핑 집권 3기 초반인 2023년 9월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협력 건설: 중국의 창의와 행동’ 백서(이하 ‘2023 백서’)를 발간했다. ‘2023 백서’는 이전 시진핑 집권 1, 2기 10년의 전략적 성과에 대한 결산과 함께 향후의 대외전략 구상과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후진타오 집권기 대외전략의 초점이 ‘평화발전’과 이를 위한 ‘조화세계 건설’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시진핑 집권 1, 2기 대외전략의 초점은 ‘평화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라는 ‘중국몽’의 실현과 이를 위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에 따라 ‘2011 백서’의 목적이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갈 것임을 국제사회를 향해 재확인하는 데 있었다면, ‘2023 백서’의 목적은 2013년 3월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의 제기부터<sup>7)</sup> 2015년 9월 그 통과<sup>8)</sup> 2017년 1월 목표의 제시<sup>9)</sup> 및 그간의 추진 성과를 포괄하고 종합해, 향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 등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었다. 실제로 ‘2023 백서’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함의와 실천에 대한 전면적인 소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광범위한 공동 인식을 응집해 세계 각국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발간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진핑이 2013년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처음 제기한 목적은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세계, 역사, 시대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5위 1체(五位一體)”는 그 총체적 틀이었고,<sup>10)</sup> 2017년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제시한 “5개 세계(五个世界)”는<sup>11)</sup>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총 목표였다고 밝

- 
- 6) 시진핑은 2013년 3월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이 현시대 조류이며 현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의존하고 동일 시공간에서 생활하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평화발전의 길을 통한 ‘중국몽’ 실현은 중국 인민만이 아니라 각국 인민 모두에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中國政府网 (2013), “國家主席習近平在莫斯科國際關係學院的演講(全文)”, [https://www.gov.cn/ldhd/2013-03/24/content\\_2360829.htm](https://www.gov.cn/ldhd/2013-03/24/content_2360829.htm). (2023년 10월 9일 검색)
- 7) 2013년 시진핑의 모스크바 연설 제목은 ‘시대 진전의 조류에 순응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順應時代前進潮流 促進世界和平發展)’로 ‘평화발전’에 무게 중심이 있었고, 연설문에도 ‘인류운명공동체’가 아닌 ‘인류’는 점차 ‘운명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언급이 한 차례 있을 뿐이다. ‘인류운명공동체’가 하나의 단어와 전략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9월 뉴욕에서 행한 제70차 유엔총회 연설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8) 연설문 제목은 ‘협력 공영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함께 건설하고 한마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자(攜手構建合作共贏新伙伴 同心打造人類命運共同體)’였다(『新華網』 2015/09/29).
- 9) 연설문 제목은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자(共同構建人類命運共同體)’였다(『新華網』 2017/01/19).
- 10) 총체적 틀로서 “五位一體” 원문은 다음과 같다. 建立平等相待、互商互諒的伙伴關係，營造公道正義、共建共享的安全格局，謀求開放創新、包容互惠的發展前景，促進和而不同、兼收并蓄的文明交流，構築尊崇自然、綠色發展的生態體系。
- 11) 총 목표로서 “五个世界”는 다음과 같다. 堅持對話協商，建設一个持久和平的世界；

히고 있다(『新華網』 2023/09/06).

여기서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백서의 초점이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에서 2023년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로 이동했다는 것인데, ‘중국’에서 ‘인류’로의 이러한 초점 변화는 지도부 교체는 물론 이 시기 중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G2’로 등극하면서 향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 개혁 추진을 염두에 둔 신흥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포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그 이론적 시각이 함께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2023 백서’는 기성 강대국 미국과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불만과 대안을 이론과 전략 양 측면에서 ‘2011 백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선명하게 노출함으로써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포의 이론적 시각과 전략의 중첩성을 응축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백서는 기존 서구의 국제질서와 국제관계 및 관행에 대한 비판과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의 옹호를 통해 양자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국제사회에 후자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천하체계론은 물론, 공생이론의 논리 및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23 백서’는 서언과 맺음말을 제외하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언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의 제기와 의의 및 발전과정, 백서의 발간 목적 등을 밝히는데, 서언에서 설정하는 본 백서의 기조는 자오팅양의 천하체계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즉,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구만이 있으며, 인류는 하나의 집(家園)을 공유한다”라는 첫 구절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당위성을 위한 물리적 전제를 설정하고,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의 향후 운명은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고난과 역경, 영욕을 함께 해야 한

堅持共建共享，建設一個普遍安全的世界；堅持合作共贏，建設一個共同繁榮的世界；堅持交流互鑒，建設一個開放包容的世界；堅持綠色低碳，建設一個清潔美麗的世界。

12) 실제로, ‘2023 백서’는 1장 3절에서 “전통적인 국제관계이론은 오늘날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류가 직면한 난국을 타개할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 주류 국제관계이론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 국제관계이론에 이러한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이론적 시각이 이 백서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는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개념 규정을 거쳐, 인류는 따라서 인류가 나고 자란 이 지구를 “화목한 대가정(和睦的大家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전개를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후 1장에서부터 결론까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상 위의 전제와 논리 전개에 기초한 근거와 사례의 제시 및 설득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23 백서’는 천하체계론을 이론적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23 백서’의 중요성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기존 서구의 이념과 달리 무엇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가에 있고, 그 핵심 부분은 현시대의 문제 진단과 해법 및 방향과 실현 경로가 제시되는 1장, 2장, 4장이 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중국 국제관계이론과 전략의 중첩성을 살펴보기로 한다.<sup>13)</sup>

‘2023 백서’는 우선 1장에서 현재 인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 길은 단결과 분열, 개방과 폐쇄, 협력과 대항이라는 선택의 기로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인류운명공동체가 담지한 이념 및 이론과 기존의 이념 및 이론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당위성을 제고하고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진단에 기초해 하위 절에서 상호의존이 역사의 대세라는 점, 세계차원의 문제는 세계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결, 개방, 협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로 순차 제시된다. 특히,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념을 요구한다는 3절에서 백서는 급변하는 현시대에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해석하고 인류가 직면한 난국을 타개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강필패(國強必霸), 실력 숭상(崇尚實力), 제로섬 게임(零和博奕)과 같은 사고방식은 시대의 진전 방향과 갈수록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패권의 추구는 반드시 쇠락으로 이어지며(國霸必衰), 약육강식이 아닌 포용과 보편적 혜택, 호혜와 공영이 ‘인간의 정도(正道)’이고, 자국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가 시대에 부합하고 역사 조류에 순응하는, 인류

13) 백서의 3장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중국의 역사 문화적 토양에서 발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5장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위시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三大全球倡議)’ 등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주창자로서 중국이 일궈온 성과와 사례를 설명하고, 맺음말에서는 국제사회 각국이 ‘천하가 자신의 소임(以天下爲己任)’이라는 책임 의식으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동참해 ‘천하의 큰길(天下大道)’을 함께 갈 것을 촉구한다.

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중국 내에서 형성 중인 국제관계이론이 기존의 서구 국제관계이론과 달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명과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인류운명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부합하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념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특히, 1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계차원의 문제는 세계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장은 천하체계론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천하’의 개념을 현대에 전략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14)</sup>

2장은 선택의 기로에 선 인류가 직면한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국이 제시하는 답은 바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고, 그 비전은 ‘5개 세계, 즉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의 번영, 개방과 포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다. 여기서 정의되는 인류운명공동체는 서인과 같이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향후 운명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난과 역경, 영욕을 함께하고, 조화롭게 공생하고 협력 공영해야 하며,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대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이 ‘5개 세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서는 다시 1장과 유사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갈림길을 규정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인류가 직면한 두 가지의 명확한 갈림길 중 하나는 냉전적 사유의 답습, 분열과 대립의 선동, 집단 대항의 조장이고, 다른 하나는 단결과 협력의 노력, 개방과 공영의 제창, 평등과 존중의 실천이며, 이러한 두 선택에 관한 게임과 경쟁이 향후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다. 물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이념은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써,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 진보의 편에 서 있으며, 국제관계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확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지혜를 제공하며, 국제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천하체계론과 공생론은

14) ‘천하’만이 세계차원의 관념이라는 천하체계론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는 백서의 3장, 즉 ‘화합이념(和合理念)’을 핵심으로 하고 “이화위귀, 화이부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중화전통문화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 유익한 계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당대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과 풍부한 인류운명공동체 유전자가 담겨있다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베스트팔렌 체제와 피아(彼我)의 적대적 구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옹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위와 같이 이분법적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중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하는 선택을 촉구한다. 다만, 천하체계론과 공생론은 후자의 선택을 위한 논리와 그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이념이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네 가지 ‘새로움’이 어떻게 ‘새로운’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관계에 관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이념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이유는 집단정치인 ‘소집단(小圈子)’ 규칙, 실력 지상의 논리, 소수 서방국가가 정의하는 ‘보편적 가치’를 초월해, 시대조류에 순응하고, 지구적 협력을 제창하며,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지혜의 제공은 개방과 포용, 공평과 정의, 조화와 공존, 다원성과 상호학습, 단결과 협력이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의 선명한 특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이상의 두 가지 새로움 중 ‘새로운’ 사고방식은 천하체계론의 ‘무외의 원칙’, ‘새로운’ 지혜는 무외의 원칙과 함께, 다원성의 인정이라는 공생론의 이념이 적용된 결과이며, 특히, 이념 자체의 특징을 새로움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논리 전개 방식도 두 이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개척한 국제교류의 ‘새로운’ 국면은 ‘5위 일체’라는 총체적 틀에 의해 가능한데, ‘5위 일체’는 각각 대항과 동맹을 넘어 대화와 동반자 형성을 지향하는 ‘동반자 관계(伙伴關係)’, 약육강식과 패도정치, 냉전적 사고를 넘어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의 수립에 기초한 ‘안보구조’,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공동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발전 전망’, 문명의 다양성 인정과 화이부동에 의한 ‘문명의 교류’, 자연에 대한 존중과 녹색발전이 이뤄지는 ‘생태체계’ 등 다섯 가지 방향의 일체화를 가리킨다. ‘새로운’ 국면으로 설명된 ‘5위 일체’에서 ‘안보구조’는 특히 도의 현실주의에 입각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생이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앞서 언급한 ‘5개 세계’의 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류운명공동체의 지향점인 ‘화목한 대가정’, 즉 천하체계론의 이론적 비전을 전략적으로 표현한 것이자 공생론의 내용을 방법론으로 적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하체계론과 공생론이 ‘후자’의 선택을 위한 논리와 그 구체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때,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제시한 ‘새로움’은 사실 ‘새로움’이라기보다는 ‘낯음’에 대한 부정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방법은 4장에서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새로움’과 유사하게 모두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관행과 기존 국제관계 및 거버넌스체제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이를 보면, 첫째는 ‘신형(新型) 경제 세계화의 추동’으로, 여기서 ‘신형’의 내용은 반(反) 세계화, 폐쇄주의, 보호주의, 일방주의, 빈익빈 부익부 등에 반대하고 각국 경제의 연계와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는 ‘평화발전의 길’ 고수로, 이는 ‘2011 백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주의와 패권주의 같은 구시대의 길이 아닌, 평화와 발전, 협력과 공영이라는 현시대의 조류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인데, ‘신형’인 이유는 국가 간 교류의 새로운 경로로서 서로 다른 문명과 제도를 가진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발전하는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공생론에 기초한 당위적 주장을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신형 국제관계’ 내에 2013년 중국이 미국에 구축을 제의했던 ‘신형 대국관계’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 구축 전략을 폐기하지 않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전략의 일부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신흥 강대국과 기성 강대국이 앨리슨(Allison 2017)이 경고한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넷째는 ‘진정한 다자주의(多邊主義)’의 실천이며, 마지막은 전 인류의 공통 가치 발양이다. ‘진정한(眞正的)’ 다자주의는 소수의 집단정치, 자국 우선의 다자주의와 같은 일방적 사유나 선택적 다자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실도 모두가 향유하는 거버넌스체계를 가리키며, 전 인류의 공통 가치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로, 이는 일부

15) 이에 관한 배경과 전략적 초점 이동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유희복(2023)의 논의 참조.

가 주장하는 소위 ‘보편적 가치(普世价值)’를 초월한 것이라 주장한다. 또, 민주를 포함한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특정 국가가 전유하거나 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한 이념전쟁의 지양과 화이부동에 의한 문명 다양성의 인정을 촉구한다. 이는 이 백서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2011 백서’에서도 이미 수차례 반복된 논리로, 사실상 미국과 동맹에 대한 비판, 보편적 가치로 주장되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천하체계론 및 공생이론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지구라는 물리적 개념, 대가정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민족/국가를 초월한 ‘인류’라는 ‘공동체’와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당위성의 강조를 통해 정치적으로 통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천하체계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천하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천하의 대도’를 함께 견지며 “무위의 원칙”을 현대에 적용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천하체계론의 시각을 반영한다. 또한, 평화발전에 초점을 둔 ‘2011 백서’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맞춘 ‘2023 백서’ 모두 ‘화이부동’, ‘이화위귀’와 같이 ‘화(和)’라는 중국 전통 개념을 공통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천하체계론, 관계이론, 공생이론의 주장을 공통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두 백서는 식민주의, 패권주의, 도덕이 부재한 자유주의적 발전 방식과 국제관계를 거부하고 강권 및 패권정치를 부정하는 등 서구 중심의 기존 이념 및 이론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동맹’ 등 ‘소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 ‘인류 공존의 도(道)’와 ‘인간의 정도(正道)’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천하체계론은 물론, 도의 현실주의의 시각을 함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국(大國)을 물질 및 권력 차원이 아니라 심리와 책무의 차원에서 인류의 향후 운명을 핵심으로 삼아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는 국가라고 규정하는 부분과 ‘민주’ 등 보편적 가치의 전유 혹은 일방적 규정, 이중잣대의 적용 등 사실상 ‘미국’을 비판하는 부분은 천하체계론, 도의 현실주의, 공생이론의 시각이 모두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백서가 ‘국정’과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통해 서로 다른 문명과 체제의 국가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천하체계론, 특히 공생이론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 및 서구 선진국의 글로벌 안보와 경

제 거버넌스체제, 그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도 모두 개혁과 재해석의 대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백서는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들의 시각을 공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11 백서’와 ‘2023 백서’에는 천하체계론, 관계이론, 도의 현실주의, 공생론 등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시각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이 전략에 복무하고 양자가 중첩성을 갖더라도 전략은 현실에 기초해 이론을 여과하므로 이론과 전략의 괴리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두 백서에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이론적 시각은 천하체계론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괴리를 보이는 것도 천하체계론이다. 그 두드러진 사례는 ‘민족/국가’라는 단위와 그에 기초한 ‘이익’ 추구 궤단의 해법, 즉 세계정부와 세계체제 및 그에 의한 인류 보편의 이익에 관한 것인데,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자오팅양은 ‘유엔’을 세계정부로 보지 않고, 따라서 유엔에 의한 체제와 거버넌스도 세계체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1 백서’에 나타나듯이 중국은 ‘주권’을 핵심이익의 중심에 두고 그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2023 백서’ 4장 4절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유일한 세계체제로써 지지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의 현실주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동반자’ 관계가 아닌 ‘동맹’의 결성을 제시하지만(Yan 2011, 143), 중국은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며 여전히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전략이 자체 국제관계이론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방증이자, 중국 국제관계이론이 자체적으로 넘어야 할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론적 한계와 전략적 도전

중국특색의 국제관계이론 형성 시도에 대해 학계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동시에 보인다. 이는 지식의 정합적 집합으로서 이론 자체에 대한 학술적 시각과 이론은 항상 주체와 목적이 있다는 콕스의 지적처럼 이론 형성 시도에 대한 학술 및 전략적 시각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의 현실주의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어 출판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서

구 학자인 다니엘 벨(Bell 2009; 2015), 그리고 비서구 국제관계이론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구 또는 주류 국제관계이론 이외의 이론 출현을 기대하는 아차리아(2007) 등 일부 서구학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국제관계이론 형성 노력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스인홍(時殷弘 2008) 등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왕이웨이(王義桅), 메이란(梅然), 친야칭 등 상당수의 학자는 대체로 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국제관계이론 형성 노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혹은 국제질서관에 대한 서구의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시기는 물론 주제와도 무관치 않게 대부분 부정적 시각과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천하 개념의 분석을 통해 그 국내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제국으로서 중국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위계적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을 경계한 연구(Callahan 2008), 중국주도의 향후 국제질서에서 현대판 조공제도의 부활을 우려한 연구(Jacques 2009), 천하의 개념과 미국의 주도권을 결합해 향후 짚개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 세기 동안의 국제질서도 ‘미국 천하(American Tianxia)’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Babones 2017) 등이 대표적이다.

노셀트(Noesselt 2012)의 경우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의 성격에 대한 평가와 시각의 이동을 보여준다. 즉, 2012년 그는 국제관계학의 ‘중국학파’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제기한 의문에 그것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이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뒤 그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가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지위 찾기의 일환이며, 그러한 이론들은 중국의 국익 보호와 일당체제 옹호의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Noesselt 2015). 기실, 기존의 주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비판이 비서구는 물론 서구 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져 왔고, 이론의 형성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되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학자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중국특색 국제관계이론의 정립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현재의 주류 이론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기 시도가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록 현재 정책 부응적 성격이 존재하고 엄밀한 서구적 의미의 거시적 이론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시각이 반영된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논리와 발전 가능성을 일축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각이 담긴 국제관계이론을 수립하려는 학자들이 향후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적지 않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이론 자체의 부정합성에 더해, 학자 대부분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의 이론화와 중국 예외주의, 서구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폄훼와 중국적 사고방식 및 개념의 긍정적 해석을 넘어선 미화 등이다.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출판 및 토론과 관련한 학술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한 국내 학자는 중국학파가 넘어야 할 이러한 장애로 다섯 가지를 종합해 제시했는데, 중국 예외주의, 이원주의(dualism), 중국 전통, 문화, 역사와 사상의 미화, 자의식을 넘어선 강대국으로서의 자만, 그리고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자국 이익의 추구가 그것이다(Kim 2016, 74-77). 이러한 이론적 미완성과 결함은 그 자체의 설득력 결여로 이어지며 현실 차원에서 전략 수립의 토대로서 이론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요소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은 물론 두 백서 모두 기존 국제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질서의 수립자이자 유지자인 미국의 인식 및 전략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부정에 가까운 비판을 가한 후, 중국의 전통 사상과 외교전략 경험에 기초한 비전과 중국이 선도하는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자신이 제시하는 21세기 국제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 자체의 한계 극복에 더해 두 백서에 나타난 전략과의 괴리 축소라는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실 차원에서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 개혁 추진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력을 확보하려면, 자신이 비판하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 및 유지자인 기성 강대국 미국의 국제질서 인식 및 전략적 도전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백서가 제시하는 국제질서 비전을 기존 국제질서의 대안 또는 적어도 개혁안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중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대외 전략을 담은 후진타오 집권기의 ‘2011 백서’와 현 시진핑 집권기의 ‘2023 백

서'에 시기와 내용상 상응하는 미 문건, 즉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각각 2010년, 2017년, 2022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질서 및 대중국 인식과 전략의 핵심 내용, 공통점과 차이점 및 추세를 간략히 살펴본다.<sup>16)</sup> 이를 통해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미·중 간 인식의 괴리와 그에 따른 중국의 대미 설득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

### 1.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질서 및 대중국 인식과 전략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5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이하 '2010 보고서')는 미국의 가치에 기초한 국력과 글로벌 리더십의 재건을 핵심으로 한다. '2010 보고서'에 명시된 미국의 가치는 민주주의, 인권,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 세 가지로, 이에선 표현, 집회, 종교, 선거 등 개인의 자유와 그 토양으로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며, 이는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한 '보편적 가치'로도 인식된다(The White House 2010, 2; 35-39). 미국은 자신이 신봉하는 이러한 가치의 대내적 실천으로 국력을 재건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대내적 실천에 의한 '모범(example)'의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가 강요가 아닌 도덕적 차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추종하도록 하려 한다. 국력 재건과 함께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갱신을 위해 미국은 우방과 동맹은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영향력을 가진 주요 강대국을 포괄하는 적극적

16)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며, 1986년 의회에서 통과된 골드워터-니콜라스 법안(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에 의해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Historical Office 1986).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미국의 전 세계적 이익, 목표, 외교정책, 이익 추구를 위한 중장기 수단 등 5개 관련 사항에 대한 포괄적 기술과 논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역대 대통령이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온 것은 아니며, 오바마 역시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만 제출했다.

인 ‘전면적 관여’ 정책과 유엔 및 나토 등 국제기구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를 재건하려 한다. 미국은 자신의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이 국제질서가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므로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규범에 기초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증진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인식한다(The White House 2010, 40-50). 간략히, ‘2010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전략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미국의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이며, 그 확립 주체는 리더로서 미국과 그 동맹 및 파트너이고, 이 국제질서에서 참여국은 안보, 번영, 기회, 보편적 가치의 향유 권리와 함께 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부여받되, 이 질서에 도전하거나 잠식하려는 국가는 고립에 직면한다(The White House 2010, 7-12).

‘2010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국제질서에 도전 혹은 잠식의 의도를 가진 국가로서 명시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면적 관여’ 정책에 따라 중국을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21세기 영향력 중심국’의 하나로서 공동이익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협력 강화의 대상으로 인식한다(The White House 2010, 11). 이에 따라 미국은 ‘긍정적, 건설적, 전면적’ 대중 관계를 추구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비확산 등 분야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책임 있는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영향력이 증대하는 만큼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밝힌다. 또, 미국은 21세기의 주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미·중 관계가 필수적이므로, 대만, 인권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중 협력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The White House 2010, 43). 이러한 대중 인식과 전략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의한 ‘재균형(Rebalancing)’이 본격화한 이후 발간된 오바마 2기의 ‘2015 보고서’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협력과 견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며 그 질서 내에서 책임지는 국가로 부상하도록 유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 2.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질서 및 대중국 인식과 전략

오바마 행정부의 ‘2010 보고서’가 미국의 가치에 기초한 국력과 글로벌 리더십 재건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려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이하 ‘2017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초점을 둔 세계의 안보, 번영,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The White House 2017, 1-4; 37)을 상정한다.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미국의 신조, 국익, 난제 대응에 대한 결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이념이 아닌 결과를 지향하는 ‘신조에 기초한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에 의해 추진된다. 또한, 평화, 안보, 번영은 대내적으로 자국민을 존중하고 대외적으로 평화 증진에 협력하는 강력한, 주권국가에 달려있으며, ‘미국의 신조(American principles)’가 세계의 선을 위한 지속적인 힘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The White House 2017, 1). 여기서 전략 지침으로서 ‘신조에 기초한 현실주의’는 일종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주권국가가 세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이며, 국익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이고, 미국의 신조 촉진이 평화와 번영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조에 기초한’ 전략이라고 설명된다(The White House 2017, 55). 이는 ‘2017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인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미국의 이익과 이익의 실현을 위한 군사력의 재건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미국 우선주의’는 미 국익과 국력뿐만 아니라, 그 전략 지침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신조를 함께 강조하며, 이를 동맹과 파트너 형성의 토대로 설정함과 동시에 국제질서 재건의 핵심 요소이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 보고서’는 ‘가치’와 ‘국제질서’를 ‘미국의 이익’ 추진 차원에서 다룬 ‘2010 보고서’와 달리, ‘가치’는 ‘미국의 영향력 증진’ 중에서 ‘미국의 가치 수호’ 부분, 그리고 중국 및 관련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지역적 맥락의 전략’ 중에서 ‘인도-태평양’ 등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와 상관없이 두 보고서 모두 미국의 ‘가치’를 대내외 전략의 기초로 인식하고 동맹과 파트너 및 ‘국제질서’ 확립과 연계한다는 데서 인식적, 전략

적 연속성을 갖는다. 먼저, ‘미국의 가치 수호’ 부분에서 미 국력의 원천으로 명시된 사상(idea)은 ‘태생적 자유’와 ‘법적 평등’이며, ‘미국의 신조’는 종교를 위시해,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이러한 자유와 법적 평등, 인간의 존엄 등은 미국인의 정체성에 핵심적이지, 동맹의 근간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명기된다(The White House 2017, 41).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치’가 국력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 보고서’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개인 및 국가의 편에 설 것이고, 전 세계에 자유와 기회의 횃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미국의 신조에 보편성을 부여하고 이를 강요보다는 모범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려 한다는 점도 ‘2010 보고서’와 같은데(The White House 2017, 37-41), 미국의 신조가 세계의 선을 위한 지속적인 힘이라는 인식이 그 방증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치 혹은 신조에 반하는 행위와 행위체에 책임을 묻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2010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한다. 즉 ‘2017 보고서’에서 미국은 억압적 정권과 인권 침해자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공동체의 혜택을 제공할 책무가 없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협하고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와 지도자는 외교, 제재 및 기타 수단을 동원해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The White House 2017, 41-42).

‘2017 보고서’에서 중국 및 관련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및 지역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직접적인 견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여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2010 보고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2017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이들 강대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The White House 2017, 25; 27). 이는 지난 20년간의 정책이 근거했던 전제, 즉 중국을 포함한 경쟁세력을 관여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대부분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가치와 힘에 의한 국제질서 주도 및 중국 등 반

민주적 경쟁세력에 대한 견제와 배제를 추진하려 한다(The White House 2017, 2-3; 27).

‘2017 보고서’는 또 세계질서에 관한 ‘자유(free)’와 ‘억압(oppressive)’의 비전 간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을 그 수위의 경쟁세력으로 규정한다(The White House 2017, 45). 중국은 자신의 꿈이 역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지배가 초래하는 것은 역내 국가의 주권 축소이며, 이로 인해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통해 주권과 독립이 존중되는 지역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미국은 인식한다. 미국은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 태평양을 비롯한 유럽 등 지역 질서 세력균형의 추가 경쟁세력 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경쟁력과 영향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The White House 2017, 45-46).

이상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국력 재건과 ‘보편적 가치’로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질서 확립, 그리고 이에 대한 수정세력과 경쟁세력의 배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중국을 협력보다는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경쟁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 확보와 그에 따른 동맹과 파트너의 적극적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이러한 성격은 ‘2017 보고서’가 상정한 미국의 미래 비전, 즉 “미 국력에 의해 뒷받침된 미국의 가치와 영향력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The White House 2017, 55).

### 3.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질서 및 대중국 인식과 전략

2022년 5월 발간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이하 ‘2022 보고서’)는 현재가 향후의 세계질서 형성을 둘러싼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라는 시대 진단과 그러한 경쟁은 국가와 세계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독재(autocracy) 간 거버넌스체제 경쟁’이라는 경쟁의 성격 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향후 10년이 이러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조건을 결정하는 ‘변곡점(inflexion point)’이 될 것이며, 이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미래 세계의 방향과 미국의 안보 및 번영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진단과 판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유효성 증명과 증진, 동맹과 파트너 및 협력세력과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의 건설을 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한다(The White House 2022, 6-8; 10).

좀 더 구체적으로, ‘2022 보고서’는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21세기 국제질서에 권위주의 거버넌스를 이입하려는 세력을 미국의 비전에 대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다. 이들 세력은 침략 전쟁을 전개하거나 준비하고, 다른 국가의 민주적 정치 절차를 잠식하며, 반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모델을 수출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미국은 이들이 냉전 후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 중국의 경우 이에 더해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혜택까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이 질서가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을 제기하고 야심을 억눌러왔다고 인식한다고 평가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매우 사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의 독재에 유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2022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세력의 비전 간 결정적 차이를 ‘약소국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여부’로 규정한다(The White House 2022, 8-9). 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국제질서 비전에 도전을 제기하는 지정학적 경쟁세력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2022 보고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추진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까지 점차 갖춰가는 ‘유일한 경쟁세력(the only competitor)’으로 평가한다(The White House 2022, 8-9; 23).

이처럼 ‘2022 보고서’에서 가장 위협적인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지목된 강대국은 중국이며,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 경쟁으로 등장하는 국제질서의 성격은 이분법적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수정주의 의도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국력 수준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전략적 대응의 최

우선 순위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2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제질서 차원에서 러시아를 억제(constraining)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전략경쟁을 통해 능가해야(out-performing)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23). 이에 따라 ‘2022 보고서’의 III부와 IV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중국 및 관련 국제질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글로벌 우선순위를 다룬 III부는 국제질서에 대한 전략적 경쟁세력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첫 번째 순위로 상정하고, 중국은 러시아와는 다른 도전을 제기하는 수위의 경쟁세력으로 규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역량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세력이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권 확장과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중국은 국제기구에 기술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권위주의 모델 허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의 활용과 규범을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유리하게 형성하려 하며, 경제력의 사용을 통해 타국에 대한 강요를 일삼고, 국제경제의 개방성을 통해 혜택은 누리면서도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는 국가로 인식된다. 또, 중국은 세계의 자국 의존도는 높이고 자국의 세계 의존도는 낮추려 하며, 신속한 군사현대화를 통해 인도 태평양과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을 잠식하려 한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관계 형성과 규칙제정을 둘러싼 경쟁이 모든 지역, 그리고 경제, 기술, 외교, 발전,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은 첫째, 미국의 국력 기반에 대한 투자, 둘째,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와의 연합, 셋째, 중국과의 책임감 있는 경쟁을 통한 국익 수호와 미래 비전 수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중국 전략을 추진하려 하며,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을 향후 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대중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으로 강조한다(The White House 2022, 23-24).

한편, 지역별 전략을 다룬 IV부에서 미국은 중국이 속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자신을 인도 태평양 세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은 지난 75년 동안 이 지역을 방어해왔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역내 동맹과 파트너 및 우호 협력세력의 규합은 물론, 생각이 같은(like-minded) 인도 태평양과 유럽 국가 간 연계 촉진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방적이고 상호연결된,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 역량을 통한 대응의 대상으로 지목된 역내 독재세력은 중국, 북한 등이며,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강압적 행위와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이 대응의 주요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37-38).

‘더 나은 세계의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을 목표로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개될 독재세력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승리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재건하려는 국제질서, 즉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의 건설을 위해 미국이 향후 ‘결정적 10년’ 동안 추진할 전략과 그 예상결과를 ‘2022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국내 차원에서 산업역량 증대, 인적 투자,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경제의 기초 강화, 회복력 강화, 국제적 신뢰성 증대, 경쟁 우위의 확보이며, 둘째, 민주주의 동맹은 물론 미국의 비전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 심화 및 확대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유리한 전략적 경쟁의 조건을 형성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군사 현대화, 첨단기술개발 추진, 국방인력 투자를 통해 점증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시대에 역지력을 강화하고 미 본토와 동맹, 파트너, 국외 이익,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가치를 보호한다. 끝으로, 미국의 강점 활용과 광범위한 동맹 및 파트너의 연합 결성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추진하고 경쟁세력을 능가하며, 기후변화, 세계 보건 및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2, 48).

이처럼, ‘2022 보고서’는 ‘2010 보고서’가 경계하고 ‘2017 보고서’가 제기했던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그 수위의 수정주의 경쟁세력으로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가치에 대한 강조,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 등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인식과 전략이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점차 심화, 확대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미·중 간 국제질서 인식의 괴리와 비전의 차이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기성 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 21세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점차 본격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립과 유지, 동맹과 파트너 중심의 협력을 통한 전략의 전개, 수정주의 또는 도전세력에 대한 견제와 배제는 위계질서 최상위의 기성 강대국으로서 행정부와 당파를 초월하는 미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백서에 나타난 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미국의 가치와 동맹 및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전면 부정에 가까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이를 미국의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 동맹이 아닌 동반자 관계, 민주주의만이 아닌 체제의 다양성 인정 등 자신의 전통 사상과 외교 경험에 기초한 국제질서, 즉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협력 구축으로 개혁 혹은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전략이 제시하는 이러한 21세기 국제질서 비전을 ‘비자유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신흥 강대국 중국이 제기하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한 ‘규칙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려 한다. 결국, 중국은 이론과 전략의 중첩을 통해 미국의 사고와 가치가 반영된 기존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수정하려 하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부정과 수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자신의 국제관계이론과 백서를 통해 제시하는 국제질서 비전을 기존 국제질서의 개혁안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따라서 21세기 국제질서가 이론은 물론 전략 차원에서도 중국의 의도대로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타당할 것이다.

## V. 결론

1978년 개혁개방과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국제사회에 본격 편입된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기성 강대국 미국에 이은 신흥 강대국으로 등극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을 도입해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던 중국은 그 학습과 적용과정에서 중국식 개념과 사유에 기초한 이론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의 주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의문의 제기과 자국 전통문화에 대한 재고를 통해 중국 특색 국제관계이론의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자오팅양의 천하체계론, 옌쉐통의 도의 현실주의, 친야칭의 관계이론, 그리고 진잉중, 런샤오 등 상하이학파가 주도하는 공생론의 탄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국 국제관계이론 유파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와 그 기저에 놓인 이념 및 사고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국제관계와 주류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초로 중국의 전통문화와 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판 혹은 대안 이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에 따라, 천하체계론은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세계질서 및 거버넌스 행위체에 관한 탐구와 인류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고, 그 현대적 해석과 적용의 역할을 중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이론은 ‘관계’ 자체를 독립변수로 보고 이에 기초해 이익과 권력 및 정체성에 관한 기존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시각을 보완하려 한다. 공생론은 천하체계론과 유사하게 다원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공생철학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 한다. 이들과 달리 옌쉐통은 주류 국제관계이론인 현실주의에 ‘도의’의 개념을 도입해 패권과 강권 정치를 넘어선 왕권 정치를 미국과는 다른 신흥 강대국 중국의 리더십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구축은 기존의 국제관계와 질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실적인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2011 백서’와 ‘2023 백서’에서 보았듯이, 이론이 복무하려는 전략 역시 이러한 대안과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제관계이론은 물론, 백서를 통해 나타난 전략의 차원에서도, 논리와 근거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당위에 대한 강

조, 이론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의 결함, 전략에 복무하려는 목적, 이론과 전략의 괴리 등 대내적 한계에 의한 것이자, 기성 국제질서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수립자로서 미국과 동맹 및 서구 선진국의 이론과 전략적 우위, 그리고 이들과 중국 간 경쟁의 본격화 등 대외적 도전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내외적 한계와 도전을 고려할 때, 21세기 국제질서가 중국의 국제관계이론과 전략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평가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서정경 (2022).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4호, pp. 35-70.
- 유희복 (2023).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폐기 혹은 전환 여부에 관한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2권. 제22호, pp. 47-93.
- 전인갑 (2015). “지식 패러다임의 反轉과 ‘帝國夢.’”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8집, pp. 225-259.
- Acharya, A. and B. Buzan (2007). “Why is there no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7. No. 3, pp. 287-312.
- \_\_\_\_\_ (2017). “Why is there no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en years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7. No. 3, pp. 341-370.
-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 Babones, Salvatore (2017). *American Tianxia: Chinese money, American power and the end of history*, Bristol: Policy Press.
- Bell, Daniel A. (2009). “War, Peace, and China’s Soft Power: A Confucian Approach.” *Diogenes*. Vol. 56. No. 1, pp. 26-40.
- \_\_\_\_\_ (2015). “Reconciling Confucianism and Nationalism.”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 41. No. 1-2, pp. 33-54.
- Callahan, William A. (2008).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Post-hegemonic or a New Hegemon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0. No. 4, pp. 749-761.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Vol. 10. No. 2, pp. 126-155.
- Jacques, Martin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Rise of the Middle Kingdom an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London: Penguin Books.
- Kim, Hun Joon (2016). “Will IR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e a Powerful Alternativ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9. No. 1,

pp. 59-79.

- Noesselt, Nele (2012). "Is There a "Chinese School" of IR?." *GIGA Working Paper*. No. 188, pp. 1-27.
- \_\_\_\_\_ (2015). "Revisiting the Debate on Constructing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hina Quarterly*. Vol. 222. June, pp. 430-448.
- Qin, Yaqing (2018). *A Relational Theory of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高尚壽 (2010). "關係主義與中國學派."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pp. 116-138.
- 郭樹勇 (2017). "中國國際關係理論建設中的中國意識成長及中國學派前途." 『國際觀察』. 第1期, pp. 19-39.
- 金應忠 (2011). "國際社會的共生論——和平發展時代的國際關係理論." 『社會科學』. 第10期, pp. 12-21.
- 魯鵬 (2018). "理解中國國際關係理論的兩種構建途徑."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pp. 73-93.
- 倪世雄·許嘉 (1997).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歷史回顧與思考." 『歐洲』. 第6期, pp. 11-15.
- 秦亞青 (2006). "國際關係理論中國學派生成的可能和必然." 『世界經濟與政治』. 第3期, pp. 7-13.
- \_\_\_\_\_ (2009). "關係本位與過程建構: 將中國理念植入國際關係理論." 『中國社會科學』. 第3期, pp. 69-86.
- 任曉 (2013). "論東亞"共生體系"原理."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pp. 4-22.
- \_\_\_\_\_ (2014). "共生體系的存在和持久性——對熊李力、陳雪飛先生的回應." 『探索與爭鳴』. 第11期, pp. 32-35.
- \_\_\_\_\_ (2015). "以共生思考世界秩序." 『國際關係研究』. 第1期, pp. 20-24.
- \_\_\_\_\_ (2019). "從世界政府到"共生和平"." 『國際觀察』. 第1期, pp. 36-50.
- 時殷弘 (2008). "三十年來中國國際政治研究的若干問題." 『當代世界與社會主義』. 第4期, pp. 72-75.
- 蘇長和 (2016). "從關係到共生——中國大國外交理論的文化和制度闡釋."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pp. 5-25.
- 孫吉勝 (2018). "改革開放以來中國國際關係理論發展——話語, 實踐與創新." 『世界經濟與政治』. 第8期, pp. 4-29.

- 徐進·孫學峰 (2014). ““清華路徑”与中國國際關係研究的發展方向.” 『國際觀察』, 第6期, pp. 18-32.
- 閻學通 (2014). “道義現實主義的國際關係理論.” 『國際問題研究』, 第5期, pp. 102-128.
- \_\_\_\_\_ (2016). “政治領導与大國崛起安全.” 『國際安全研究』, 第4期, pp. 3-19.
- 趙汀陽 (2010). 『每个人的政治』,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_\_\_\_\_ (2011). 『天下体系: 世界制度哲學導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2. 기타

- 김현준 (2016).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동아시아연구원.
- Historical Office (1986).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 The White Hous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 \_\_\_\_\_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 \_\_\_\_\_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 “多元世界的共生之道.” 『文匯報』, 2017年 5月 5日.
- “習近平在第七十屆聯合國大會一般性辯論時的講話(全文).” 『新華網』, 2015年 9月 29日.
- “習近平主席在聯合國日內瓦總部的演講(全文).” 『新華網』, 2017年 1月 19日.
- “携手构建人類命運共同体: 中國的倡議与行動.” 『新華網』, 2023年 9月 6日.
- 中國政府网 (2013). “國家主席習近平在莫斯科國際關係學院的演講(全文).” [https://www.gov.cn/lhdh/2013-03/24/content\\_2360829.htm](https://www.gov.cn/lhdh/2013-03/24/content_2360829.htm). (2023년 10월 9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1). “《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全文).” [https://www.mfa.gov.cn/web/system/index\\_17321.shtml](https://www.mfa.gov.cn/web/system/index_17321.shtml). (2022년 11월 1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02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02월 29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03월 21일 |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Chinese IR Theory and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The Overlapping Dynamics of Theory and Power**

**Hee-Bok Yoo**

(International Affairs and Services Team,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hina's conception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and its feasibili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erspectives of China's major schoo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verification through strategy.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f China's vision of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overlapping of theories and strateg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guments of China's major schoo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hina's foreign strategies in the 2011 White Paper on China's Peaceful Development and the 2023 White Paper on Global Community of Shared Future. It then examines the feasibility of China's envisioned international ord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perceptions of China and the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the founder and supporter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that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commonly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ories based on China's own political culture, believing that China should play a constructive role in reform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he two white papers also criticiz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governance ideology, and try to reform them based on China's unique cultural

concepts and experience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strategy, given the limitations of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tself and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e dominant power that h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 Key words: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ianxia, Chinese Characteristic, U.S.-China Relations